

종합·해설

정부, 영암·해남·진도까지 확대 외면

■ 서남권 개발사업 대거 누락

면세 단지·크루즈 부두 줄줄이 백지화 "균형발전 헛구호인가" 지역민들 반발

전남도가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과 대상 지역이 대부분 누락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운 서남권 개발 프로젝트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지역특성을 감안해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 대거 제외됐거나 2009년 이후로 미뤄지는 바람에 지역활성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더욱이 전남도가 목포·무안·신안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위해 영암·해남·강진·완도·진

도까지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외면 당해 서남권 전체의 동반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진도의 조류발전, 완도의 해양식품연구센터 건립 등 취지에 부합되는 개발사업은 포함해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다 서남권 물류 중심의 기반이 될 무안국제공항을 축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형 복합면세 쇼핑단지 ▲농산물 유통물류 시범단지 ▲아시아농업 비즈니스 파크와 기초소재 복합가공 물류센터(목포) 등은 사업당첨이 없다는 이유로 대체사업 발굴로 선회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형 면세쇼핑단지는 여행객 통제가 불가능하고 유통질서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 서남권개발 사업성 검토결과

Table with 2 columns: 분류 (Classification), 사업내용 (Project Content). Rows include '중장기(2009년 이후) 추진(예)' and '타당성없어 대체사업 발굴(예)'. Items listed include '대안광수소전지 부품소재공정(목포)', '크루즈전용부두건설(·)', '창포호 주변 레저단지 무안', etc.

있다는 이유로 재경부가 반대했다. 또 농산물 유통물류 시범단지는 지난 2004년 광양에 준공된 물류센터의 운영 상황을 고려해 규모 축소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초소재 복합가공 물류센터는 전남지역 철강 수요가 부족하고 광양에서 이미 같은 사업이 추진돼 포스코 등 관련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농업 비즈니스 파크는 농산물수출 특화단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데다 국내 전시회장의 만성 적자 등을

고려해 철회했다.

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려 했던 중요사업도 미뤄졌다. 목포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도 입항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무안 창포호 주변 레저단지는 무안군도 사업 개발 계획에서 창포호가 제외됨에 따라 수변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대체됐다.

신안 압해도~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는 예비타당성 검토는 미흡하지만 관광사업 활성화와 성장잠재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만큼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 섬지역 연륙·연도교 건설사업과 다도해 복합레저단지 등은 새천년 대교 건설과 연계해 사업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 서남권종합개발계획 사업구역에 영암·해남·강진·완도·진도를 포함하고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신규사업을 대폭 추가하는 등 모두 61건의 사업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차지기자 unipark@kwangju.co.kr

지역활성화 족쇄 '규제' 풀어라

③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특구'를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출범했다.

기업설립 65개 인·허가 승인 얻는데만 1년 걸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일반지역과 별반 다를 것없는 규제의 문턱에서 좌절감을 맛보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산업체 설립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업종이나 입지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36개월을 65개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설치 관련 법규에는 인·허가 사항을 관련 부처와 '적법하게 협의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기업과 관련 부처의 주된 협의대상은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허가·공유수면매립·분류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는 일반지역에서 기업 설립에

조성비에 건의한 바 있다. 실시계획 승인시 현행 전체 6개월 이내로 되어있는 기간을 5개월로 줄이고 농지전용 허가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시·도지사의 허가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환경영향 평가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달라는 주문도 포함돼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학교의 취득 부

■ 경제자유구역 비공인 지역 인허가

Table with 2 columns: 소관 부처 (Responsible Agency), 관련 인허가 (Related Permits). Rows include '농림부'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건설부' (Construction), '해수부'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재정부' (Finance), '환경부' (Environment), '보건복지부' (Health and Welfare), '산업청' (Industrial Complex Administration).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여건 개선 수차 요청 정부 간소화 대책 안내

필요한 기본 인허가 사항들로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규제들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비공인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면적 규모에 따라 최대 16개 개별 법령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인·허가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기업을 지치게 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기간은 항목별로 30일이나 대부분 초과하기 일쑤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인 여수 화양지구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주)일상의 경우 필요한 17개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관련 인허가를 추진했던 일상은 9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부 등에 수차례 자유구역 인허가 간소화를 요청했으나 개선은 눈에 띄지 않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하반기 각종 규제완화와 투자여건 개선을 국무

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금 및 부담금 감감 등 투자여건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검토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부담이 적어 따라 수차례 개선방안을 건의했으며 기업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다"고 말했다.

■/차지기자 unipark@kwangju.co.kr

▲경제자유구역=일정한 구역에서 각종 행정 규제 및 세제 예외를 인정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특별지역. 광양만권,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순천·여수·광양 3개시 2천733만평과 경남 하동지구 380만평 등 모두 3천113만 평에 이른다.

■ 盧·DJ '대통합 발인' 정치권 파장

'사분오열' 汎與 통합 '뒷심싱기'

우리-민주 '이전인수' 해석 한나라 "대선 판도 흔들기"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범여권의 대통합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동시에 내놓아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19일 광주 무등산 산행에서 "대세를 읽는 정치를 하던 안된다"며 "작년 말 나는 지역주의로 돌아가는 통합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도 지금도 그것이 대의이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우리당이 분열되고 깨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 인천 공항 귀빈실에서 환경객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가 바라는 것 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당제도일 것이다. 대선이 실시되는 금년 하반기에 가변 양당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두 전·현직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특정인사 배제론' 이후 대통합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범여권에 사실상 대통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19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을 등반했다. 노 대통령 내외가 장봉대에서 무등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다. <최대재 제공>

정치권에서는 특히 당초 독자 수순을 밟는 행보를 보였던 노 대통령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거리를 뒀던 DJ와의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추후 범여권 통합 문제는 범여권 인사들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DJ의 공조 체제 아래서 진행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의 각 정파와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DJ의 발언이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소(小)통합' 추진을 비판한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 편의적으로 DJ의 발언을 이용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도개혁통합 정당 건설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며 현재의 좌우이념 대립형의 한국정당 구조를 중도와 보수가 양립하는 구조로 바꿔서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본격적인 '소통합' 협상을 앞두고 있는 통합신당의 양형일 대변인은 "두 분 말씀에 다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소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단초로 대통합을 열겠다는 것이 소통합에 만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대세 수용론'에 대해 "노 대통령이 드디어 지역주의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기기자 ta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tour) travel agency. Features various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Europe, and other destina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offers.